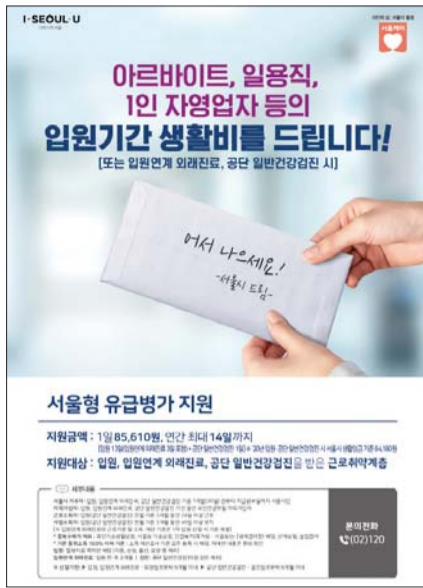


# 서울시, 입원한 일용직·영세 자영업자에 생활비 11억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전체 86%인 2115건 지급 완료  
중장년층, 제도 가장 많이 이용  
신청자의 절반 이상, 사업소득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서울시

올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24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자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뒤를 이었다.

14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신청 건수는 2469건(7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5.7%인 2115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총 11억 2815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아닌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1일당 8만 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김자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부연구위원과 함지혜 주임연구원은, 이다호 연구원은 어떤 이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이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청 건수를 분석했다.

재단 연구진이 상반기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40~50대 신청건수가 127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60~80대 노년층 930건, 20~30대 청년층 264건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 신청 건수는 사업소득자가 129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52%)을 차지했다. 일용근로자(621건, 2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324건, 13%), 기타 근로자(230건, 9%)가 그다음이었다.

직업 분류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 종사자(476건),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325건), 기타 근로자(296건), 제조·청소·경비·기타서비스 단순 노무직(270건),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직(247건), 건설 단순 노무직(166건), 문화·예술·스포츠 관련직(89건), 정보통신·교육 관련직(86건), 종교 관련직(17건)이 뒤를 이었다.

그간 근로 취약계층 시민들은 입원 시에만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올해부터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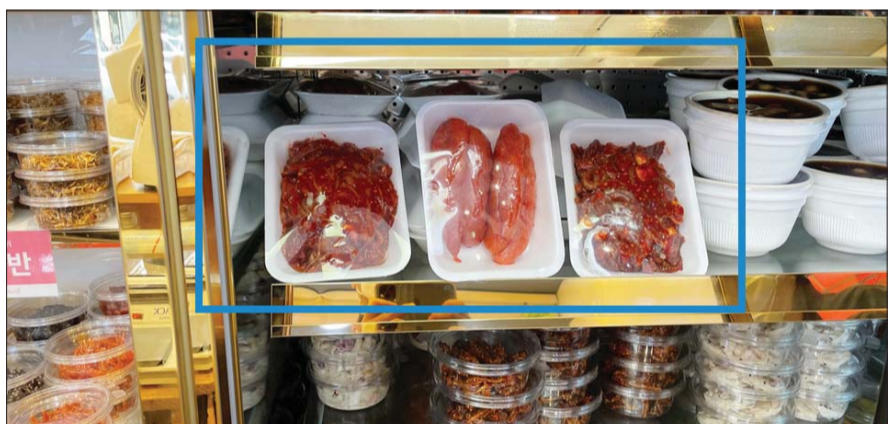
의료이용 형태별 신청건수는 입원이 1330건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이어 검진(578건), 입원+외래(359건), 입원+검진(85건), 입원+검진+외래(53건), 외래(52건), 검진+외래(12건) 순이었다.

김자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부연구위원은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서 새롭게 변화한 부분은 입원 연계 외래진료에 대해 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입원 연계 외래 신청 건수는 전체의 19%가량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지원 확대 방안이 실질적 이용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므로 효과 평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원산지 미표시 한과 알고보니 중국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점검  
유통기한 경과 등 9곳 적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 중인 반찬가게.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7개 자치구와 중점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 제조·판매업소,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 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

장과 배달업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사용한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김치전 같은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노숙인 국민지원금 신청 돕는다

작년 재난지원금, 노숙인 36% 수령  
노숙인 밀집 지역에 상담 창구 마련



거리 노숙인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일부 거리 노숙인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거리 노숙인 중 36%만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는 올해 거리 노숙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도움 예정이다. 또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 상담 시 노숙인들에게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주고,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 휴대전화 연락처가 없어 카드 발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개·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동물의료다.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 시민은 이달 15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료(1회당 5000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계층이다.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사업으로 동물 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 가능하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40곳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5일 (수) 음력 : 8월 9일

수도권 날씨 19~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15/27, 동두천 16/27, 가평 16/26, 파주 16/27, 서울 19/28, 양평 16/28, 수원 19/28, 용인 19/28, 평택 17/28, 백령도 20/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RCEP 내년 1월 초 발효”... 한중일·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  
▲미 의회 난입 사태 재현은 없다...워싱턴 D.C. 경비 강화 /사진 뉴스스

▲美 국방부 “北 미사일 시험발사, 주변국·국제사회에 위협”  
▲日 혼다·도요타, “美 민주당의 친노조 전기차 세계 계획에 반대”



▲日 새 총리·백신 기대에...닛케이 지수 장중 31년만 최고치  
▲대만군, 중국 침공 대응 대규모 한광 훈련 개시 /사진 뉴스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